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 도시철도 2호선 포기 시사 왜

수송분담 효율성 낮고 市 재정 부담 너무 크다

광주 교통정책 대대적 변화 이어질 듯

예초 도시철도 2호선의 지상고가 방식에 회의적이었던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당선 후 택지지구·산업단지·전통시장 등의 현장방문에서 수렴된 여론을 감안, 2호선 포기 쪽으로 급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철도가 수송분담률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며, 향후 광주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2호선 건설보다는 시내버스의 기능 제고에 방점을 찍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강 당선자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광주 교통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 당선자는 20일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전통시장을 둘러봤더니 그곳 민원의 핵심은 시내버스였으며,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보다는 시내버스 혜택을 시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의 지상고 가방식에 대해 ▲도시 경관 저해 ▲건설 이후 수정·보완 불가능 ▲예산

투입 대비 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던 강 당선자의 의중이 ‘2호선 건설 포기·시내버스 확대 개편’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강 당선자는 향후 의견수렴을 전제로 “2호선을 포기한다면 도시철도 건설분담이 필요 없게 돼 향후 시설관리분부 명칭을 변경하게 될 것”이라며 “시내버스에도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공동으로 정비하도록 해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시내버스 확충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도시철도 1호선의 수송분담률은 2.1%이며, 시내버스가 38.2%로 가장 높았고 자가용(31.3%), 택시(17.6%), 기타(1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수송분담률이 가장 낮은 도시철도에 1조9062억원을 투자해 2호선을 만드는 것보다 수송분담률이 높은 시내버스에 투자를 늘려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강 당선자는 “국토해양부가 지하철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안 하고 지상고가방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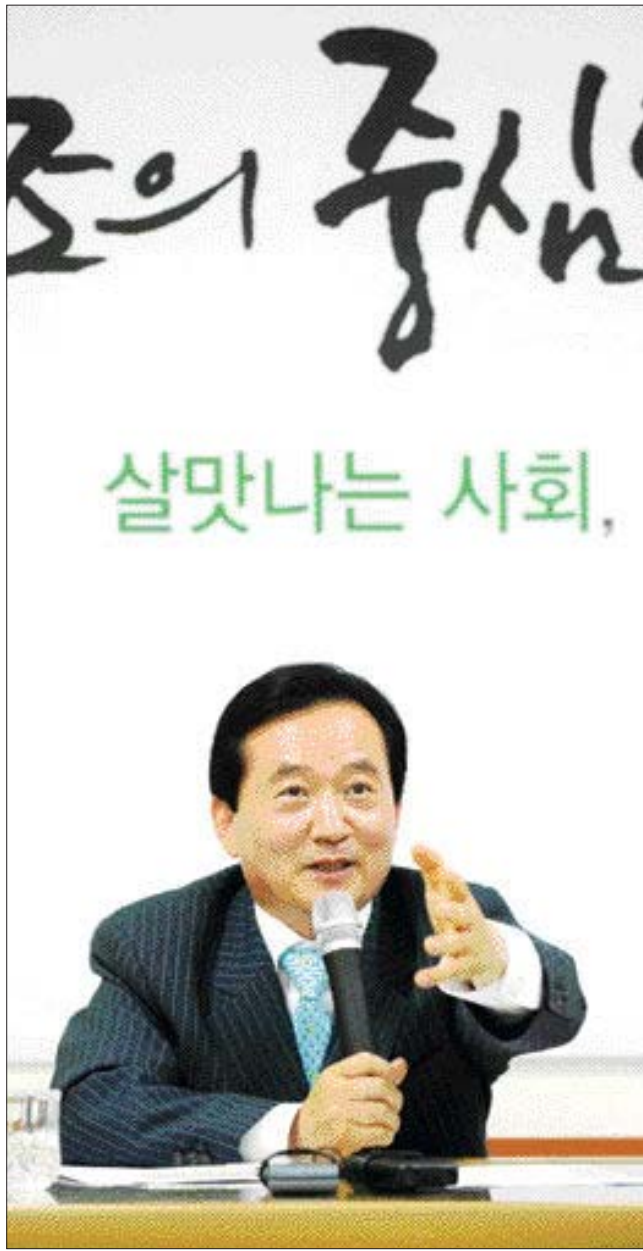
방식을 정해 광주와 대전이 이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며 “국비 50%를 확보하는 것에 얽매어 광주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여러 사례를 감안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당선자가 시내버스의 기능 및 서비스 제고에 나설 경우 ▲시내버스 중앙 전용차로제 확대 ▲간선·지선·마을버스 노선 및 차량 추가 확보 ▲구도심 등 일부 구간에 노면전철(tram) 도입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도시철도 2호선을 포기할 경우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중교통 강화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당면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수차례 논의 끝에 기존 27.4km에서 41.7km로 늘어나고, 노선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전남대~일곡~첨단~수완~운남~시청으로 결정된 바 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1·2단계로 나눠 우선 1단계를 2011년 착공, 오는 2024년까지 전 노선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강 당선자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20일 낮 광주시 남구 '민선5기 인신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취임 이후 시장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박시장, 후임자에 모든 것 맡겨주길...
공직자들 조직개편 전혀 겁낼 것 없다”

■ 강운태 당선자 일문일담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일한다면 조직개편에 대해 겁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바쁘지 않으면 박광태 시장과 만나겠으나, (박시장 이)모든 것을 뒤에 오는 사람에게 맡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담.

-그동안의 광주시장에 대해 평가한다면.
▲과거 시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면 주민 참여가 높고 자치가 확대됐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광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 더 크게 발전하지 못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조직개편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전혀 겁낼 것 없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열심히 일하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광주가 창조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려면 6000여 공직자가 함께 뛰어야 하며, 아이디어를 제출해 결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우대하겠다.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원칙은 있는가.
▲법과 원칙,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할 것이다. 과거 인사를 존중해야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경영진단을 해야겠지만, 현재는 산하기관 업무 중 민간 위탁을 해야 할 것도 있고, 시정에 부담되는 조직도 많이 있다.

-영산강 사업이나 무안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전남도와 엮바자를 내고 있는데.
▲광주·전남의 상생협력은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한다. 광주가 서남해안 중추도시로 세계 속으로 나아가려면 국제공항은 필수적이다. 무안공항으로 광주공항의 국제선 15편이 옮겨갔으나 결국 4편만 남아있다. 이는 무조건 이전한다고 해서 광주공항의 기능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앞으로 무안공항~광주시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접근성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산강사업의 경우 수질개선에 우선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진행되는 영산강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수질개선을 먼저 하면 나중에 관련 사업비를 따낼 수 있을 것이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25일 만나기로 했다.
▲25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일정이 바뀔면 7월 초라도 만날 생각이다. 박 시장도 앞으로의 목표가 있는 만큼 이를 돕겠다. 그러나 시장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모든 것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 맡겨졌으면 한다.

-남구 보궐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24일부터 3박4일간 서울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물론 정세균 대표와도 만나기로 했다. 그 때 제 생각을 전하겠으며, 중랑감 있으면서도 참신한 인물이었던 한다는 생각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디자인국 만들어 ‘문화수도’ 다지기

광주시 민선 5기 조직개편...인권·일자리 창출 담당관도 신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의 민선 5기 광주시청 조직개편안은 ▲도시디자인국·도시교통국 신설 ▲개발형 직위제 확대 ▲첨단·문화·인권도시에 적합한 조직 구성 등으로 요약된다.

강 당선자는 20일 “행정안전부 규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생각했던 대로는 하지 못했지만 창조의 중심도시인 광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은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당선자는 다음달 중 광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보청 인사를 단행한 뒤 올 연말까지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전체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시디자인국·도시교통국 신설 = 강 당선자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도시디자인국의 신설이다. 현재 도시건축국 산하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지만, 도시계획·건축주택·광교로·공공디자인까지 포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시디자인국은 ‘문화수도 광주’라는 이미지를 각종 건축물과 공공 시설

물·공공 공간 등에 표현하도록 집행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부산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시디자인국’이 일반적·국의 사업 및 정책 집행과정에 직접 관여하며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위치가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존 건설교통국은 도시교통국으로 그 이름이 바뀐다.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된다.

◇개발형 직위제 대폭 확대 =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사회복지국장·여성정책관·보건환경연구원장 등 3개 직위가 개발형이었으나 올 초 인사에서 사회복지국장과 여성정책관에 공무원원을 발령시켜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장만이 개발형 공모직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강 당선자는 여성복지국장·감사관·공보관·인권담당관·일자리 창출 담당관·투자유치담당관 등을 개발형으로 해 외부인사를 들일 방침이다. 인권담당관과 일자리 창출

담당관은 신설된다.

강 당선자는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라는 브랜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에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가 아름답게 꽃피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인권담당관은 인권지표를 만들고 매년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과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 그리고 장애인 취업률 등을 인권지표로 삼아 이를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광주를 ‘UN 인권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강 당선자는 “브라질의 푸리찌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등은 UN이 정한 환경도시로 매년 관광객 수 백만 명씩 찾아가는 곳”이라며 “광주가 UN인권도시로 지정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담당관은 각 실·국의 사업 및 정책에서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종시·4대강·대북결의안 ‘전운’

6월 임시국회 상임위별 쟁점법안과 전망

21일부터 시작되는 6월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핵심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당장,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은 물론, ‘스폰서 검사’ 특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결의안 등을 둘러싸고 불꽃 공방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선정한 중점법안 33개를 포함한 108개의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해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17개를 ‘MB의 법’으로 규정, 상임위 단계에서 적극 저지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종시의 ‘운명’이 가려질 국토해양위는 여야 간의 치열한 경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토위에서 세종시 수정 법안들을 표결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여권 내부에서 ‘분회의 회부 뒤 표결 처리’ 의견이 표출되면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나라당 주류 일각에서는 국토위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분회의 표결을 강행할 태세다.

4대강 사업을 놓고서도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사법위에서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다룰 예정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김수환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안과 계류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 ‘대북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국정조사 뒤 논의하자는 민주당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난타전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에서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